

제3회 공익·인권 분야 연구 결과 보고서 02

사법절차에 있어서
장애인의 진술권 증진을 위한
입법 등 개선사항 연구



서울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변호사회

사법절차에 있어서 장애인의 진술권 증진을 위한 입법 등 개선사항 연구

〈연구팀〉

조장곤 변호사(포에스 법률사무소)

이정훈 변호사(법무법인 에셀)

송시현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명노연 변호사(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김영호 변호사(변호사 김영호 법률사무소)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법변호사회 회장 박종우 변호사입니다.

우리회는 변호사의 공익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익변호사 및 공익단체를 지원·양성하고자 산하에 프로보노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지방법변호사회는 그동안 위 프로보노지원센터를 통하여 회원님들의 공익·인권 분야 연구 활동을 격려하면서 재정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공익·인권 연구에 대한 열정을 가진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하여 ‘제3회 공익·인권 분야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연구 결과를 회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우리 회의 인권 옹호 활동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몹시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3회 공익·인권 분야 연구 활동 지원사업’ 공모에는 총 10팀이 참가신청을 하였고,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3팀(이혜정 회원 외 4인, 조장곤 회원 외 4인, 김광훈 회원 외 3인)을 선정하였습니다. 이혜정 회원 외 4인 팀은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개정 방향’을 주제로, 조장곤 회원 외 4인 팀은 ‘사법절차에 있어서 장애인의 진술권 증진을 위한 입법 등 개선사항 연구’라는 주제로, 김광훈 회원 외 3인 팀은 ‘한반도 아동기금 설립 및 운용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반년에 걸친 연구팀들의 심층적인 연구 끝에 오늘 이 자리에서 위 연구의 결과물들을 회원님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공모사업에 지원해주시는 연구팀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회는 앞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인권 및 공익의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연구 활동을 펼치는 회원님들을 응원하고,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회의 연구 활동 지원 사업이 공익·인권 분야에 대한 연구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변호사의 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더 많은 회원님들이 지속적으로 공익·인권 분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3회 공익·인권 분야 연구 결과 보고서’ 발간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박종우**

“공익·인권분야 연구활동 지원사업” 개요

1. 취지

사회 각 분야에서 인권 및 공익이 더욱 획기적으로 증진되기 위해서는 그 구조를 형성하는 제도 및 정책 등의 변화가 필요한바, 인권과 공익의 향상을 위해 제도적인 연구를 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회원들을 지원하고, 나아가 더 많은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동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2. 참가 대상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3. 지원 부문

- 공익·인권 관련 법령 제·개정에 대한 연구
- 공익·인권 관련 정책 제안 또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 국외 인권 환경 및 제도, 판례 등에 대한 연구
- 기타 공익·인권 향상을 위한 각종 이론적·실무적 연구

4.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5. 진행일정

구분	날짜	비고
모집 공고	2018. 9. 4.(화)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전 회원 이메일 공지
모집 기간	2018. 9. 4.(화) ~ 2018. 9. 28.(금)	총 10팀 지원
심사 기간	2018. 10. 1.(월) ~ 2018. 10. 24.(수)	1차 심사 :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2차 심사 : 상임이사회
심사결과 발표	2018. 10. 25.(목)	선정 회원에게 개별 연락
연구 중간보고서 접수	2019. 2. 15.(금)	
중간보고서 검토 및 보완 요청	2019. 3. 8.(금)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최종 연구보고서 접수	2019. 3. 29.(금)	

6. 선정 팀 및 선정 이유

연구팀	연구주제	선정 이유
이혜정 (연수원 41기) 외 4인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p>본 연구에서 목적으로 삼은 디엔에이법은 장래 범죄예방과 수사편의라는 미명 아래 심각한 남용의 문제가 있고, 외국사례에도 디엔에이 관리 소홀과 오염으로 인한 오판의 문제가 다수 소개돼 있으며, 질병과 가족력을 내포하고 있는 유전정보로 인해 그 가족까지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어 평생 낙인효과를 수반할 우려가 있음.</p> <p>이에 헌법재판소에서 지적한 문제를 시정하고, 해외 적용사례와 국내외 논문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올바른 디엔에이법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는 연구 목적과, 이를 통해 개정안을 제출하여 법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는 활용 방안 등이 본 지원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며, 연구 결과의 효과적인 활용도가 기대됨.</p>
조장곤 (연수원 40기) 외 4인	사법절차에 있어서 장애인 진술권 증진을 위한 입법 등 개선사항의 연구	<p>장애인 피해자인 경우와 피의자인 경우의 진술조력 등 장애인의 진술권 보장을 위한 규정이 미흡하고, 전담조사관제도는 운영이 미비한 것이 현실임. 이에 특히 정신적 장애인의 사법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증진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 사항 등을 밝히고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는 연구 목적 및 필요성에 위원 모두가 공감함.</p> <p>선행연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기초로 입법 등 개선방안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음.</p>
김광훈 (변시 5회) 외 3인	‘한반도 아동기금’ 설립 및 운용에 관한 연구	<p>한반도 평화의 분위기 속에서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남북교류와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한반도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남북한 어린이들이 정치와 이념을 떠나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은 남북화합과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p> <p>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고, 공동기금 및 기구 설립 운용과 남북한 아동인권실태 분석 및 개선, 남북한 교류를 위한 다양한 기구 설립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 활용방안을 높이 평가하였음.</p>

목 차

I. 들어가며	8
1. 들어가며	8
2. 연구의 계기	9
II. 장애인 진술권 관련 국내외 주요 법제	11
1. 국내법령	11
가. 헌법	11
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1
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
2. 장애인권리협약	14
III. 장애인 사법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도 현황	15
1. 진술권 증진에 관한 현행법상의 제도	15
가. 진술조력인 제도	15
나. 보조인	16
다.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17
라. 농아자 통역	19
마. 성폭력범죄처벌법상의 제도	19
바. 기타 관련 법령	22
2. 발달장애인 전담조사 제도	23
가. 서설	23
나. 발달장애인의 특징과 전담조사 제도의 필요성	24
다. 제도의 운용 현황	25
라. 관련 제도와 비교	27
3. 장애인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29
가. 서설	29
나. 장애인 의사소통 관련 국내외 법령 현황	30
다. 외국 사례	36

IV. 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 진술권 침해 사례 39

1. 수사 과정 39
 - 가. 언어장애인을 배제한 수사 사례 39
 - 나. 발달장애인에 대한 진술권 침해 사례 40
 - 다.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부족 44
2. 재판 과정 45
 - 가. 심리적으로 동요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신뢰관계인 입회를 보장해 주지 아니
하고 발달장애인 본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는 사례 45
 - 나. 발달장애인에 대한 대체어 사용을 하지 아니하는 사례 45
 - 다. 성인인 발달장애인에 대해 반말하는 사례 45

V. 장애인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각종 제도들의 한계 및 개선방안 46

1. 진술조력인 제도 46
 - 가. 문제의 제기 46
 - 나. 진술조력인의 자격 46
 - 다. 진술조력인의 지위와 역할 47
 - 라. 장애인 진술권 증진 측면에서의 진술조력인 제도의 한계 49
2. 발달장애인 전담수사관 제도의 한계 49
 - 가. 적정 규모의 전담 인력의 배치 필요 49
 - 나. 인력배치의 편중 문제 50
 - 다. 전문성 확보의 문제 50
3. 장애인 진술권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 51
 - 가. 진술조력인 제도 관련 51
 - 나. 발달장애인 전담조사관 제도 관련 52
 - 다. 수사·재판 실무와 관련한 제언 54
 - 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활동보조인의 적극적 활용 필요성 55

VI. 결론 - 사법기관의 인권감수성 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의 확대 필요성 ... 56

참고문헌 58

I. 들어가며

1 들어가며

‘장애인을 조력의 대상으로만 볼 수는 없으며, 장애인의 기본권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장애와 장애인에 관한 여러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명제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2007년 4월 10일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2011년 1월 4일 제정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은 장애와 장애인 및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였고, 장애인에 대한 주거와 활동보조인¹⁾ 등의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장애인의 탈시설화와 사회적 참여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장애인을 조력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한 것 또한 현실이다. 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장애인과의 거래에 후견인의 법률행위 대리를 요구한다거나, 놀이공원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보다는 동석자의 동반을 요구하는 모습 등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의사의 결정이 미숙하거나 의사의 표현이 어려운 정신적 장애인²⁾이나 중증 장애인들의 경우, 장애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려는 노력 자체가 미흡하다. 후술할 바와 같이, ‘뇌병변장애인과 같은 중증 장애인의 경우라도 자신의 의사를 직접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보완대체의사소통의 논의는 장애인 인권 활동가들에게조차 생소하며, 장애인의 주체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실효적인 조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시각은 다수의 활동가들 역시 마찬가지인 듯하다.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선언한 헌법 제10조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것을 규정한 헌법 제11조가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를 고려할 때, 장애인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사법절차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1) 2018년 11월 23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그 명칭이 활동지원사로 변경되었다.

2)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을 주로 염두하였으나,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의 정의에 따른 정신장애인이거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정의인 정서·행동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발달지체를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차별을 받지 않아서는 안 된다. 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직접 가능한 범위에서 표시할 방도를 마련하여달라는 요구는 특별한 시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명사회의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요청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은 우리 현실에서 메아리 없는 아우성에 불과한 듯하다. 지체장애인과 활동가들이 그동안의 치열한 투쟁을 통하여 장애인이동권이 증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체장애인은 직원의 도움 없이 법원의 문을 열거나 회전문을 통과하지 못하며, 진동휠체어를 타고서는 법정을 들어갈 수가 없다. 2016년 기준 서울에서 제일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강서구³⁾의 관내 경찰서는 경관 책상 맞은편의 의자를 치우지 않으면 크기가 보다 작은 무동력휠체어조차 통과를 할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절차에서 장애인의 진술권 증진 방안, 특히 장애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고양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자체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나, 혼자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세상도 포기하지 않는 이들의 노력으로 바뀌어 가는 게 이치라 생각하며 본 연구가 작은 기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 연구의 계기

변호인들이 경찰에서 피의자를 변호할 때면 한 번쯤은 보기 마련인 경찰현장을 소개한다. 멋진 문구들의 연속이지만 지면 관계로 전문은 생략하고, 경찰의 나아갈 길 부분만을 인용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친절한 경찰이다.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고,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경찰이다.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경찰이다.
우리는,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근면한 경찰이다.
우리는,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깨끗한 경찰이다.

예전과 달리 수사기관의 인권감수성이 높아지고 인권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개선되고 있는 것도 분명 사실이라 생각하나, 강도 살인의 누명을 쓰고 복역하였다가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된 ‘삼례 나라슈퍼 사건’⁴⁾을 떠올리며 위 선언을 다시 읽어보자. 우선 이 사건이 군부독재시절이나 거칠

3) 서울 통계정보시스템의 서울 자치구별 장애인 현황에 의하면 2016년 기준 강서구는 총 28,240명의 장애인이 거주하며, 두 번째인 구로구의 17,213명의 약 두 배에 이르고 있다.

4)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유 할머니(당시 77세)를 살해한 뒤 현금과 패물 등을 털어 달아난 사건이다. 경찰은 당시 수사 끝에 삼례에 거주하던 최 모(당시 19세), 임 모(당시 20세), 강 모 씨(당시 19세) 등 3명을 붙잡아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대법원은 1999

게 표현하여 쌍팔년도 시절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당시에도 수사기관에서 노골적으로 피의자를 폭행하거나 강압수사를 벌이는 일은 흔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경찰과 검사 모두가 위 강령을 준수할 정도의 성인은 아니며, 가정과 일상을 가진 생활인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찰과 검사는 인권을 존중하고 양심에 따라 정의를 추구하여야 하지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장애인을 상대로 사건을 처리하고 진범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감추기 위해 진범을 무혐의 처분하였다. 당시 법원은 실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즉 수사기관과 법원이 좀 더 인권을 존중하기를, 좀 더 정의롭기를, 좀 더 양심적이기를 좀 더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기를 기대함은 당연하나, 사법기관 공무원에게 그러한 공직자로서의 자세만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한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공동체 모두가 성인이 아니기에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 법과 제도이고, 위 해결 또한 법과 제도에 의한 시스템적인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생각의 토대를 두고 사법절차, 특히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의 진술권 보장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년 10월 최종 유죄 판결을 내렸고 이들은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가 부산지검에 접수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당시 부산지검은 진범으로 지목된 용의자 3명을 검거해 자백을 받은 뒤 전주지검으로 넘겼으나, 전주지검은 자백 반복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부실·조작 수사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었으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 모 씨 등은 만기 복역 후 출소했다. 이후 복역했던 세 사람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검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경남에 사는 이 모(48)씨가 “나를 비롯한 3명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자백을 하면서 사건은 급물살을 탔다. 그리고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장찬)는 2016년 7월 8일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에서 “진범의 자백 등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네이버 지식백과 인용).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동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강압수사 사실을 인정하면서, 수사단계의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장애인 조사에 관한 필수적 영상녹화제도 마련, 검찰 수사관에 대한 기피·회피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하기도 하였다.

II. 장애인 진술권 관련 국내외 주요 법제

장애인 진술권에 관한 국내외 주요 법령과 제도를 우선 개관한다.

1 국내법령

가. 헌법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선언한 헌법 제10조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것을 규정한 헌법 제11조는 장애인의 사법절차적 기본권을 논함에 있어 다시 강조하여도 과하지 않다.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결정), 특히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은 자기결정의 측면 외에, 결정한 것을 외부에 온전히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의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 의사전달이 느린 언어장애인이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이해와 심리적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및 수화언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 등의 경우를 생각하면 될 것이다.

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8. 4. 11.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⁵⁾은 장애와 장애인의 개념과 정의에 관한 기존의 편견을 극복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즉, ‘비장애인들이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이라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개념에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장애인을 기피하려는 ‘차별적 사회 기제’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람

5)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차별사건 4,508건 중 장애차별 진정사건은 630건으로 전체 차별의 14%에 그쳤으나, 시행 이후인 2008년도에는 전체 차별 진정사건 1,058건 중 61%인 645건, 2009년은 전체 차별 진정사건 1,720건 중 43.3%인 932건, 2010년도는 전체 차별 진정사건 2,674건 중 63%에 해당하는 1,677건의 장애차별 진정사건이 접수되었다. 염형국, “장애인차별금지법 영역을 기준으로 한 외국 사례 연구 - 미국 장애인법과 호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11. 10, 5면 참조.

이 장애인이라는 점을 동법은 분명히 하였다.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아니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장애인을 기피하려는 ‘차별적 사회 기제’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⁶⁾

6)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 ①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 ①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④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2012.10.22.>
- ⑦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시행령 제17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

- ①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한국수어 통역, 대독(代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교정·구금시설에서 계구(戒具)를 사용하거나 고충 상담, 교도작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8.2.>
- ②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른다.

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은 인지력 의사소통능력 등이 부족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스스로 보호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학대, 성폭력, 인신매매, 장기적인 노동력 착취 등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의사소통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법절차상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에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고, 그 보호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지원법’이라 한다)이 2015. 5. 20. 제정되어 2015. 11. 21.부터 시행되었고, 특히 동법 12조에서는 사법절차상 권리보장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⁷⁾

발달장애인지원법의 제정이유는 사법절차에서의 정신적장애인의 특성을 잘 보여주기 위하여 인용하도록 한다. “발달장애인은 전체 등록 장애인 중 소수에 불과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세수, 화장실 사용 등의 간단한 일상생활조차도 타인의 도움이 없이 영위하기가 어려워 평생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발달장애인은 인지력·의사소통능력 등이 부족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스스로 보호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학대·성폭력, 인신매매, 장기적인 노동력 착취 등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한편,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인프라는 그 필요량에 비해 지원 규모가 부족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부모나 보호자들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정서적인 부담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이나 평생교육 등 능력계발을 위한 지원체계도 상당히 미흡한 실정인바, 발달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장애 범위, 그 가족이나 보호자 등의 특수한 수요에 부합될 수 있는 지원체계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의 근거를 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보호자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전체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7) 제12조(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발달장애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그의 보호자, 제33조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직원이나 그 밖에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③ 법원은 발달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본인, 검사,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따라야 한다.

2 장애인권리협약

유엔장애인권리협약⁸⁾⁹⁾ 제12조 3항에서는 ‘당사국은 장애인이 법적 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고, 제13조 1항에서는 ‘당사국은 장애인이 조사와 기타 예비적 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증인을 포함한 직·간접적 참여자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적 편의 및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2항에서는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경찰과 교도관을 포함하여 사법 행정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적절한 훈련을 장려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법절차에서의 진술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2008. 12. 2. 국회비준을 거쳐 2009. 1. 10. 조약 1928호로 발효하였고, 헌법 제6조 1항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 다만, 동 협약 제25조 ‘마’호의 생명보호 관련 규정에 대하여는 유보하면서 협약을 비준하였다.

9) 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되기 이전 장애인의 인권은 국제인권조약들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인권조약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987년 UN총회에서 이탈리아 정부가 36개 조항으로 구성된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국제협약을 제안하면서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여러 당사국의 반대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2001년 제56차 UN총회에서 멕시코의 빈센트 파스(Vincent Fox)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성안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면서 협약 제정이 본격화되었다. 이 제안이 2001. 12. 총회에서 채택되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국제협약에 관한 특별위원회’의 설립이 결정되었다. 2002. 8.부터 8차례의 특별위원회가 개최되어 성안된 장애인권리협약안은 2006. 12. 13. 제61차 유엔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의 결의로 채택되었다.

Ⅲ. 장애인 사법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도 현황

1 진술권 증진에 관한 현행법상의 제도

가. 진술조력인 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범죄처벌법’이라 한다)은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술조력인 제도를 두고 있다. 즉,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 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는데, 피해자나 그 대리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 내지 표현능력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성폭력범죄처벌법을 준용하여 진술조력인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¹⁰⁾

10) 성폭력범죄처벌법 제35조 내지 제39조

제35조(진술조력인 양성 등)

- ① 법무부장관은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양성하여야 한다.
- ② 진술조력인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진술조력인의 자격이나 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성한 진술조력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6조(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진술조력인은 조사 전에 피해자를 면담하여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나. 보조인

형사소송법 제29조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등이 보조인이 될 수 있고,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뢰관계 있는 자가 보조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¹¹⁾

- ④ 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 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검증에 관하여 준용한다.
- ⑥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수사절차 참여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 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문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진술조력인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진술조력인의 의무) ① 진술조력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중립적인 지위에서 상호간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진술조력인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진술조력인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의 적용 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준용) 아동학대범죄의 조사·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부터 제32조 까지,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 력”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본다.

11) 형사소송법 29조 (보조인)

-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 ②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가 보조인이 될 수 있다. <신설 2015. 7. 31.>
- ③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2015. 7. 31.>
- ④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7. 31.>

형사소송규칙 11조(보조인의 신고)

-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조인의 신고는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사이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29.>
- ② 공소제기전의 보조인 신고는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다.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신뢰관계자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할 때 옆에서 피해자의 심신의 안정을 돕고자 마련된 제도이다.¹²⁾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으로 증인신문 시 신뢰관계자를 피해자와 동석하게 할 수 있다.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는 범죄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신뢰관계인을 동석을 의무화하였다.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는 수사절차에서도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은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동법 제163조의2를 준용함으로써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인정하고, 13세 미만자나 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 내지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경우 동석을 필요적으로 동석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의자의 경우에도 동법 제244조의5에 따라 피의자가 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내지 의사결정·전달능력이 미약한 경우와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직권 내지 피의자 등의 신청으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임의적 동석이며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 제22조 제4항은 “사법경찰관은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으로 수사에 부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신뢰관계자의 동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광범위한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엔 형사소송법은 임의적 동석 제도만을 인정할 뿐이었고, 필요적 동석은 성폭력특별법상 인정될 뿐이었으나, 그 개정으로 인하여 일반법인 형사소송법과 특별법상 특별한 차이는 없게 되었다.¹³⁾

12) 2013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진술조력인 역할모델 정립’, 22면 참조.

13) 형사소송법 163조의 2

-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 6. 1.]

형사소송규칙 84조의 3(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① 법 제163조의2에 따라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 5. 29.>
- ② 법 제163조의2제1항에 따른 동석 신청에는 동석하고자 하는 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동석이 필요한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법 제16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가 부당하게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7(증언실의 동석 등)

① 법원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법 제1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때에는 제84조의5에 정한 증언실에 동석하게 한다.

② 법원은 법원 직원으로 하여금 증언실에서 중계장치의 조작과 증인신문 절차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07. 6. 1.]

형사소송법 제276조의 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① 재판장 또는 법관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2. 피고인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6. 1.]

형사소송규칙 126조의 2(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 ① 법 제276조의2제1항에 따라 피고인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그 밖에 피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② 법 제276조의2제1항에 따른 동석 신청에는 동석하고자 하는 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동석이 필요한 사유 등을 밝혀야 한다.
- ③ 피고인과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판장은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부당하게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본조신설 2007. 10. 29.]

검사의사법경찰관리에대한수사지휘및사법경찰관리의수사준칙에관한규정제22조(피의자의 신뢰 관계자 동석)

- ① 법 제244조의5에 따라 피의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의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신뢰관계자"라 한다)을 말한다.
- ② 피의자나 법정대리인이 신뢰관계자의 동석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동석신청서 및 동석 대상자와 피의자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고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그 취지를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동석 조사 이후에 동석 대상자와 피의자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피의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적어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은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으로 수사에 부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신뢰관계자의 동석을 거부할 수 있다.
- ⑤ 피의자신문에 동석하는 신뢰관계자는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행위 외의 불필요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법경찰관은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으로 수사에 부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신뢰관계자가 부당하게 수사의 진행을 방해할 때에는 피의자신문

라. 농아자 통역

형사소송법은 청각장애인의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청각장애인의 통역에 관한 근거 조항을 두고 있다.¹⁴⁾

마. 성폭력범죄처벌법상의 제도

성폭력범죄처벌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의 여러 제도를 두었는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특별법이 이를 준용함은 물론,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과 같이 그 제도가 일반법에도 반영되고 있다.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비록 기술한 부분과 일부 중복이 있을 수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권 증진에 관련된 제도 일반을 소개하도록 한다.

1) 영상물의 촬영 보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의 경우 거칠고 날선 법정에서의 반대신문보다는 사건 초기의 생생한 기억 속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영상녹화의 방법으로 왜곡 없이 온전하게 보전한 다음, 이를 진술전문가나 심리학자 등으로 하여금 전문적·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하게 하여 그 신빙성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피해자의 보호는 물론 실체진실발견을 통하여 피고인의 무고함을 밝히는 방편이 될 수도 있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¹⁵⁾

도중에 동석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검사의사법경찰관리에대한수사지휘및사법경찰관리의수사준칙에관한규정 제23조(피해자의 신뢰 관계자 동석)

① 법 제22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63조의2에 따라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의자”는 “피해자”로, “신문”은 “조사”로 각각 본다.

14) 형사소송법 181조(농아자의 통역)

농자 또는 아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15) 성폭력범죄처벌법 제30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여야 하고, 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

2) 증인지원시설의 설치 운영

법정에 출석하는 피해자가 재판 전후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증인지원관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진술능력이 더욱 부족할 수 있고, 가해자의 의사지배 영향이 보다 강할 수 있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의의가 크다.¹⁶⁾

게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제1항의 녹화장소에 도착한 시각, 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녹화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또는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영상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⑦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성폭력범죄처벌법 제32조(증인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각급 법원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등이 재판 전후에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설치한다.

② 각급 법원은 제1항의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피해자등의 보호와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이하 “증인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③ 법원은 증인지원관에 대하여 인권 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④ 증인지원관의 업무·자격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심리·재판 절차 및 피해자(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아동·청소년,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을 말한다) 등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12. 1., 대법원규칙 제2696호, 2016. 11. 29., 타법개정]의 증인지원관에 관한 규정을 소개한다.

제4장 증인지원관

제13조(자격)

①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증인지원관을 둔다.

② 증인지원관은 증인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경력·인품·적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배치한다.

③ 고등법원장은 증인지원관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방법원 소속 증인지원관으로 하여금 고등법원 증인지원관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① 각급 법원은 증인지원관에 대하여 증인의 보호·지원 업무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 및 인권 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증인지원관의 직무에 관한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은 법원공무원교육원이 관장한다.

③ 증인지원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서 정한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의 증인지원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각급 법원 증인지원관의 소양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전문가의 의견 조회

성폭력범죄처벌법은 법원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범죄를 조사·심리할 때에는 그 조회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 수사 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경우에도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함을 의무사항으로 하였다. 성폭력범죄 관여자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들의 관여가 가능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¹⁷⁾

4) 신뢰관계자 동석

제15조(업무)

① 증인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판의 진행절차, 법정의 구조와 좌석의 위치, 증인신문의 의미, 증인신문의 순서와 방법, 증언과 피해자 의견 진술의 방법 및 절차,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 절차 등에 대한 안내
2. 증인신문 전후 증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3. 증인지원시설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4. 피해자 증인의 요청에 의한 재판장의 명에 따른 공판진행 사항에 관한 정보제공 업무
5. 그 밖에 증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증인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급 법원장(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장)이 증인지원관의 업무로 정한 업무
- ② 증인지원관은 증인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제1항(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변안전조치를 받는 경우 관할 경찰서 소속 공무원의 법원 내에서의 신변안전조치에 협력한다. <개정 2014. 9. 1.>
- ③ 증인지원관은 증인지원 사건의 업무현황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정기적으로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증인지원위원회) ① 각급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증인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증인지원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3. 증인 보호 및 지원 업무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증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각급 법원장(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급 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17) 성폭력범죄처벌법 33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 ①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조사·심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조회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관련 전문가 후보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준용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으로 본다.

성폭력범죄처벌법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법원이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수사기관이 조사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¹⁸⁾ 특히 성폭력범죄처벌법 제34조 제3항은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결정권을 보장하는 근거 규정으로서 의미가 크다.¹⁹⁾

바. 기타 관련 법령

장애 등의 경우 통역 및 진술 보조에 관한 그 외의 여러 규정들을 간단히 소개한다.

1) 민사소송법 및 시행규칙

민사소송법은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통역 및 진술 보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동규칙 30조의 2는 신뢰관계인 동석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²⁰⁾

18) 형사소송법은 13세 미만자나 변별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인 경우에만 의무규정임은 전술한 바와 같다.

19) 성폭력범죄처벌법 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① 법원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5조(제9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은 수사기관이 같은 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민사소송법 제143조(통역)

- ①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② 통역인에게는 이 법의 감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143조의2(진술 보조)

- ①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술보조인의 자격 및 소송상 지위와 역할, 법원의 허가 요건·절차 등 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 2. 3.]

민사소송규칙 제30조의 2(진술 보조)

- ① 법 제143조의2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없어야 한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그 밖에 동거인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타

그 외에도 군사법원법, 출입국관리법, 재외공관공증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등이 장애인의 통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²¹⁾

2 발달장애인 전담조사 제도

가. 서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경찰서장에게 발달장애인 전담검사 및 발달장애인 전담사법경찰관을 각각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에게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 또는 신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과 법 제143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심급마다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법 제143조의2제1항에 따른 법원의 허가를 받은 진술보조인은 변론기일에 당사자 본인과 동석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때 당사자 본인은 진술보조인의 행위를 즉시 취소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1. 당사자 본인의 진술을 법원과 상대방,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개하거나 설명하는 행위

2. 법원과 상대방,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진술을 당사자 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개하거나 설명하는 행위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진술보조인이 한 중개 또는 설명행위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진술보조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⑤ 진술보조인이 변론에 출석한 때에는 조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고, 제3항에 따라 중개 또는 설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법 제143조의2제2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2. 2.]

21) 군사법원법 제223조(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의 통역)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진술은 통역인이 통역하게 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48조 제6항(용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신문)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의 진술은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에게는 문자로 묻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재외공관공증법 제15조(통역인)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이 국어를 알지 못하는 경우 또는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그 밖에 말을 하지 못하고 글자도 읽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통역인을 사용할 수 있다.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0조(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등)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인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에는 심판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권으로 심판변론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마찬가지이다.

상기한 진술권 증진에 관한 소송법령과 관련 특별법상의 제도가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에게도 적용되는 일반 제도라 한다면, 발달장애인 전담조사 제도는 장애인 인권 관련 특별법에 근거하여 장애인만을 적용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고 다른 범죄 유형(성폭력, 가정폭력)과는 달리 피의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할 것이므로,²²⁾ 별도의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나. 발달장애인의 특징과 전담조사 제도의 필요성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발달장애인은 그 장애 특성상 타인의 언어를 이해하고 공감한 뒤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말과 글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의사소통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발달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발달장애인들은 어려서부터 시설에서 거주하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접촉이 활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회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서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경우, 수사관이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그에 따른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발달장애인이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 발달장애인의 진술을 유도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대표적 예가 위에서 든 ‘삼례 나라슈퍼 사건’이다. 반면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가해자 및 가해시점, 장소 등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무혐의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담사법경찰관·전담검사가 발달장애인 피의자·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하는 전담조사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에 대해 전담 인력의 수가 지극히 부족하여 전담 수사관을 통한 조사가 지나치게 지연되며, 그나마 있는 전담 인력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 감수성도 그다지 높지 않음을 주요 논거로 하여 전담검사·수사관을 둘 것이 아니라 수사 인력 일반이 발달장애인의 특징을 이해하고 수사에 감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전담조사관 제도를 반대하는 일선 활동가들의 의견도 있으나, 현재 제도의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궁극적인 목표 즉,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 함양

22) 발달장애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범죄유형에 따라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전담조사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학교전담사법경찰관 제도도 중복하여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전담조사관 제도의 현황을 살피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

다. 제도의 운용 현황

1) 경찰

가) 배치 현황

발달장애인전담사법경찰관(이하 ‘전담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은 2016년부터 배치되기 시작하였다. 전국에 배치된 전담사법경찰관은 2017년 기준으로 2,500명이며, 지방경찰청별 전담사법경찰관 배치 현황은 다음과 같다(2017. 7. 말 기준, 경찰청 자료).

구분	계
총계	2,500
서울	1,157
부산	87
대구	169
인천	92
광주	86
대전	30
울산	33
경기남	237
경기북	166
강원	55
충북	45
충남	50
전북	53
전남	76
경북	59
경남	87
제주	18

나) 관련 법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경찰청훈령 제674조)이 제정되어 있다. 경찰청은 2015년 「장애인수사매뉴얼」을 발간한 바 있고 발달장애인법 시행 후인 2017. 10.에는 다른 장애인과 다른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발달장애인전담경찰관 조사가이드」를 발간하였다.²³⁾

다) 교육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차원에서 발달장애인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담사법경찰관 대상으로 연간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근거는 앞서 발달장애인법 제13조 제3항이며, 경찰수사연수원, 각 지방경찰청 경찰교육센터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²⁴⁾ 전담사법경찰관만이 아닌 일반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조사과정교육’이 실시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교육의 핵심 내용은 발달장애인의 이해 및 그에 대한 조사기법 등으로 구성된다.

2) 검찰

가) 배치 현황

2018. 6. 기준으로 전국에 발달장애인 전담검사(이하 ‘전담검사’라 한다) 86명이 지정되어 있으며, 발달장애인 피의자, 피해자가 조사를 받는 경우 전담검사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건을 수사, 처리한다.²⁵⁾

나) 관련 법규

「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 「성폭력사건처리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지침」, 「장애 유형별 피해자 조사가이드」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²⁶⁾

23) 장애의 이해 및 사법지원, 발달장애인조사 가이드,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 조사가이드 (경찰청, 2017) 참조.

24) 각 지방경찰청마다 세부 주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피해자 상담기법, 가해자 상담기법, 인권교육, 발달장애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조사와 소통방법,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등으로 구성된다.

25)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에서의 검찰 처리 예시는 대검찰청 2018. 6. 12. 자 보도자료 “발달장애인, 전국의 전담검사가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하겠습니다” 참조.

26) 위 보도자료 참조.

다) 교육

지방검찰청 단위로 별도의 정기적인 발달장애인전담검사교육과정을 실시하여 운영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해양경찰

해·수산업계에 종사하는 장애인과 관련, 불법적인 지적장애인 소개, 임금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2018년 말까지 전담사법경찰관을 지정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 한다.

라. 관련 제도와 비교

1) 범죄피해자지원 제도

강력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회복과 지원을 위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의 일환으로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다. 직접적인 근거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이며, 이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의 책무(같은 법 제4조)에 뿌리를 두고 있다.

범죄피해자지원 제도는 피해자 전담경찰관과 피해자심리전문요원 제도로 이루어진다. 피해자 전담경찰관은 전국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배치되어 주요 강력범죄 발생 초기 위기개입으로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지원활동을 전개하는 경찰관으로서 피해자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피해자심리전문요원(CARE: Crisis-intervention, Assistance & REsponse, 위기개입·지원·대응팀)은 심리학 전공자 및 관련분야 경력자를 경찰관으로 특채, 전국 지방청 청문기능에 배치하여 강력범죄 발생 초기 피해자 전문심리평가 및 상담으로 심리적 응급처치 실시 및 안정을 유도하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²⁷⁾

2)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제도

개별 법률에 직접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는 아니며 경찰청은 2014. 3. 2. 자체적으로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을 지정하고 2015. 2. 여성청소년수사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7년 12월

27) 경찰청 홈페이지 참조.

기준 여성청소년수사과 인원은 3,049명이다.²⁸⁾

여성청소년과의 아동여성계는 가정폭력성매매성폭력예방, 성폭력범죄자 관리, 아동장애인성폭력 범죄수사, 성폭력특별수사대 및 원스톱지원센터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청소년계는 청소년 비행방지, 학교폭력 대책 수립, 소년범죄 수사, 가출인 및 실종아동 등 발견대책 수립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²⁹⁾ 전담체계의 핵심으로 학대예방경찰관(APO, Anti-abuse police officer)이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3)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15년 기준 전국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은 1,075명이다.³⁰⁾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 예방 및 해체, 그 밖에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경찰청장은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을 둘 경우에는 학생 상담 관련 학위나 자격증 소지 여부, 학생 지도 경력 등 학교폭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전담조사제

성폭력범죄 관련 형사사법절차에 여러 특례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제도이다(제26조). 다른 전담조사 제도와 달리 전담재판부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제28조).³¹⁾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하고,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

28) 조주은,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슈와 논점(국회입법조사처) 제1411호(2018. 1.), 1면 참조.

29) 「수사절차론」, 사법연수원(2015), 318면 참조.

30) 조인식,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국회입법조사처) 제1193호(2016. 8.), 1면 참조.

31) 제28조(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하여야 한다.

금 성폭력범죄 전담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는 제1항의 검사 및 제2항의 사법경찰관에게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장애인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가. 서설

보완대체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이란 뇌병변장애인, 언어장애인 등의 장애특성이나 개별욕구에 따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러 형태의 의사소통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의사소통지원 프로그램, 태블릿, 의사소통 조력자, 그림, 낱말카드 등의 수단을 의사소통에 활용하는 것이다.³²⁾

상기한 여러 제도들은 장애인의 진술권 증진을 위한 조력을 내용으로 하거나, 장애인과 장애의 특성을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보완대체의사소통의 문제는 장애인이 직접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장애인이 표현의 자유 및 사법절차적 기본권의 향유 주체임을 고려할 때 논의의 의미가 무척 크다 할 것이다.

보완대체의사소통은 비교적 최근 논의되고 있고 직접적인 근거를 갖는 법령의 제정 노력도 없었으며³³⁾, 무엇보다 사회 일반의 인식 수준이 대단히 낮은 상황이다.³⁴⁾ 국내나 해외에서 뚜렷이 발견할 만한 학술적·실무적인 자료 또한 발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나, 장애인이 직접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상은 장애인의 진술권의 관점에서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라 생각되는 점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려 한다.

32)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2017년 의사소통권리지원사업 안내, 2017 참조.

33) 최근 서울과 부산에서 상징적인 내용의 조례가 제정된 바 있다. 구체적 내용은 후술한다.

34) 2013년. 3. 9. 특수교육학과, 언어병리학과 교수들을 주축으로 한국보완대체의사소통학회가 창립되었다. 현재는 특수교육, 언어병리, 공학 및 재활의학 교수와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그 기반이 넓어졌으나, 사회 일반의 인식이 지극히 낮은 실정이다.

나. 장애인 의사소통 관련 국내외 법령 현황

1) 국내법령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제14조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중의 하나로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각종 보완 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을 대여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동법 제20조는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를, 제21조에서는 정보통신 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 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 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³⁵⁾

35)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9호·제20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3호·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3조 (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

나) 장애인 복지법

동법 제35조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하여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AAC 보급 및 활용 지원 등을 계획한 바 있다.³⁶⁾³⁷⁾

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동법 제10조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학습에 필요한 의사소통도구를 개발하고 의사소통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고 있다.³⁸⁾

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동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각종 학습보조기기, 공학기기 지원 및 정보접근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제2조, 제21조, 제28조, 제31조), 특히 동 시행령 제16조는 통합교육시 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 정도,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기,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 대체 기구 등의 교재, 교구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³⁹⁾

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화, 점자,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36) 서울특별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2013, 25면.

37) 제35조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38) 제10조 (의사소통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학습에 필요한 의사소통도구를 개발하고 의사소통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발달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등을 통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담당 직원이 발달장애인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침을 개발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 의사소통도구의 개발·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마) 조례

그 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련 조례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⁴⁰⁾이다.⁴¹⁾ 이 조례에서는 장애인이 의사소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제21조(통합교육)

②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④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1조(편의제공 등)

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4. 정보접근 지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 (통합교육을 위한 시설·설비 등)

②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기,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대체기구 등의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 4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의사소통”이란 언어, 혹은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3. “의사소통장애인”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장애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
4.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① 의사소통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 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의사소통장애인은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시정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의사소통장애인에게 보완대체의사소통 상징체계, 단말기 및 프로그램, 주변기기, 의사소통 조력인, 한국 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기 등의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통과 정보접근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고,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련 홍보 및 인식 개선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는 보완대체의사소통에 관한 각 장애인의 진단 평가, 중재, 지속적인 활용, 및 지역사회 환경 구축 등의 전반적인 역할 수행을 예정하고 있다.

이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AAC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건립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서울시를 시작으로 부산시에서

③ 시장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홍보 및 인식개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에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홍보와 인식개선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

제7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심의 및 자문) 시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사업의 컨설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41) 서울시가 2013년경 수립한 ‘서울시 장애인권리증진계획’은 2014년부터 서울시 5개 권역에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 설립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이행은 없었다. 의사소통의 지원은 장애유형 및 건강상태, 생애주기에 따라 맞춤형서비스가 필요한데, 서울시 의사소통권리 지원사업은 대부분 공모사업 형태로 장애유형에 상관없이 인원수에 따라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이러한 사업비성격의 예산은 사업수행인력 지원의 부재와 사업의 전문성 약화를 초래할 뿐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2017년 12월 18일 김진철 외 13명 시의원의 발의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도 거의 동일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AAC 활성화 및 의사소통권리증진 계획수립 및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운영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보다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⁴²⁾

조례 제정 이후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바우처콜택시 등의 AAC관련 바우처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⁴³⁾

2) UN 장애인 권리 협약

UN 장애인 권리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UN CRPD)⁴⁴⁾은 의사소통지원 관련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전문은 장애인의 정보와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2조는 의사소통을 문어·음성언어·단순언어, 낭독자 및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을 포함한 확장적이고 대안적인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식뿐만 아니라 언어, 글자표시, 점자, 촉각을 통한 의사소통, 대형 인쇄, 접근 가능한 멀티미디어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3조는 협약의 일반원칙으로 접근성을 들고 있고, 제4조는 당사국이 신기술을 포함한 이동 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과 그 밖의 다른 형태의 보조·지원 서비스 및 시설에 관하여 접근 가능한 정보를 장애인에게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9조는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당사국이 정보와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21조는 당사국이 장애인의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 대체적인 의사소통, 접근가능한 모든 의사소통 수단 등의 사용을 수용하고 촉진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제24조는 교육과 관련하여 대안적인 의사소통의 방식을 촉진하고, 가장 적절한 언어, 의사소통 방식으로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 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⁴⁵⁾

42) 제주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의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제주도 공포번호 제1901호, 공포일자 2017. 8. 9., 충남 공포번호 제4313호, 공포일자 2017. 12. 29.)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에 국한되었음에 반하여 본 조례는 그 적용 대상과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의 역할 범위가 넓다는 점에 그 의의가 크다.

43) 보건복지부는 2016년 경기도 용인, 성남을 대상으로 AAC관련 바우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및 주관은 한국사회서비스산업협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44)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and Dign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G.A. Res. 61/106, Annex I, U.N. GAOR, 61st Sess., Supp. No. 49, at 65, U.N. Doc. A/61/49 (2006), entered into force May 3, 2008;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의 실현과 보장을 위해 2006년 국제연합에서 채택된 협약으로 대한민국은 2008년 비준에 동의하여 2009년 효력이 발생하였다. 외교부 공식 번역문 참조.

45) <UN 장애인 권리협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전문

협약의 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 및 보건과 교육, 그리고 정보와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제2조 정의

“의사소통”이란 문어·음성언어·단순언어, 낭독자 및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을 포함한 확장적이고 대안적인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식뿐만 아니라 언어, 글자표시, 점자, 촉각을 통한 의사소통, 대형 인쇄, 접근 가능한 멀티미디어를 포함한다.

제3조 일반원칙

이 협약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가)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 (나) 비차별
- (다)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 (라) 인간의 다양성과 인류의 일원으로서의 장애인의 차이에 대한 존중 및 수용
- (마) 기회의 균등
- (바) 접근성
- (사) 남녀의 평등
- (아) 점진적 발달능력 및 정체성 유지를 위한 장애아동 권리에 대한 존중

제9조 접근성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와 의사소통,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을 식별하고 철폐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적용된다.
 - (가) 건물, 도로, 교통, 학교, 주택, 의료시설 및 직장을 포함한 기타 실내·외 시설
 - (나) 정보, 의사소통 및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
2. 당사국은 또한 다음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가)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과 지침을 개발, 공표하고 그 이행을 감시할 것
 - (나)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체가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하여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보장할 것
 - (다) 장애인이 직면한 접근성 문제에 대하여 관계자에게 훈련을 제공할 것
 - (라)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점자 및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공공표지판을 설치할 것
 - (마)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안내인, 낭독자, 전문수화통역사를 포함한 형태의 현장지원과 매개체를 제공할 것
 - (바) 장애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타 적절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를 촉진할 것
 - (사)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촉진할 것
 - (아) 최소한의 비용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초기 단계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의 고안, 개발, 생산 및 보급을 촉진할 것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당사국은 이 협약 제2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얻고 전파하는 자유를 포함한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 (가) 일반 대중을 위한 정보를 다양한 장애유형에 적합하게 접근 가능한 형식과 기술로 장애인에게 시의적절하고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할 것

다. 외국 사례

1) 호주

가) 남호주의 장애인 사법접근성 개선 사례(Access to justice, the South Australian journey)

호주는 2008년 UN CRPD 서명을 하게 된 것을 계기로 하여 국가 장애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호주 사회통합위원회(social inclusion board)를 통해 ‘Strong Voices Report’가 만들어졌다. 동 보고서는 호주 장애인들의 사법제도에서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목적은 첫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우선 순위 조사 및 기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 둘째, 검찰이 장애인이 피해자라고 주장되는 사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것, 셋째, 상처 받기 쉬운 증인들을 지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2013년 Change South Australia의 지원을 받아 90일간 법원행정 당국, 호주 경찰 및 검찰, 교육 및 아동 개발 부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장애인 등 취약한 피해자들, 목격자들의 증거 제시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는 프로젝트를 진행되었다. 2015년 위 프로젝트는 연장되었고, 경찰 또한 이에 참여하여 장애인들이 사법제도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거부당했던 사례 등을 공유하였다. 법원, 수사기관,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심포지엄이 개최되기도 하였다.

위 지침에 따라 새로운 법이 제정되기도 하였고, 1929년 증거법 개정법(Statutes Amendment Act)이 그것이다. 동법은 2015. 7. 남호주 의회를 통과한 「취약한 증인법(Vulnerable witnesses Act)」의 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장애인의 공평하고 공정한 사법제도 이용에 관한 기회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구체적인 소통을 바라는 자는 피고인이든, 피해자이든, 증인이든 누구든지 형사

(나) 장애인의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 장애인의 선택에 따른 수화, 점자, 확장적이고 대체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의사소통의 기타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 방식 및 형식의 사용을 수용하고 촉진할 것

제24조 교육

3.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 및 사회성 발달 능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점자, 대체문자, 확장적이고 대안적인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식, 적응지도 및 이동능력의 학습을 촉진하고, 동료집단의 지원과 조언을 촉진할 것

(나) 수화 학습 및 청각 장애인 집단의 언어 정체성 증진을 촉진할 것

(다) 특히 시각, 청각 또는 시청각 장애를 가진 아동을 포함하여 이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교육이 개인의 의사소통에 있어 가장 적절한 언어, 의사소통 방식 및 수단으로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

4. 이러한 권리 실현의 보장을 돕기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 교사를 포함하여 수화 그리고/또는 점자언어 활용이 가능한 교사를 채용하고 각 교육 단계별 전문가와 담당자를 훈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훈련은 장애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완적이며 대인적인 방식, 수단 및 형태의 의사소통, 교육기법 및 교재의 사용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법 절차 내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이 부여되어야 하고, 소통을 주로 담당하는 자와의 접근성 또한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남호주의 움직임은 특히 AAC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평등한 접근을 촉진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나) 호주 NSW 민사행정법원 후견인 지정 관련 사례

후견인 지정과 관련하여, AAC 사용자가 재판의 패널(panel)로서 참여하여 AAC를 사용하는 당사자의 재판을 진행한 의미 있는 사례가 있었다.⁴⁶⁾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AC의 한 종류인 음성 생성 통신 장치를 사용한 한 여성(이하 ‘MHN’)의 부모가 의료 및 숙박 문제를 돕겠다는 이유로 그녀의 후견인(guardians)이 되고자 했다. MHN은 자신이 몸이 좋지 않을 때 의사소통 장치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의사결정을 도와주고 때때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부모를 후견인으로 임명하기를 원한다고 진술하였다.⁴⁷⁾

재판소는 AAC 사용자가 의사결정 패널의 일원이 되어 참여하였고, MHN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야기할 수 있음을 주지시켜주었다. 또한 참석자들의 질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MHN에게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 과정도 있었다. 재판소는 MHN이 구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지만 의사결정능력이 손상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2) 캐나다⁴⁸⁾

캐나다에서는 2018. 6. 20. 장애물 없는 캐나다를 보장하는 법률안(the Accessible Canada Act)이 하원에서 발의되었다. 이 안은 Bill C-81로 불리는데, ‘연방정부기관과 연방정부의 통제를 받거나 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서비스⁴⁹⁾와 관련하여, 신체적, 정신적, 지적, 학습, 의사소통 또는 감각 장애 및 기타 여러 유형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대한 일체의 장애물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상 기관들은 건축물과 공간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장애인 고용에 관한 정보와,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상품,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

46) MHN [2017] NSWCATGD 14

<http://www.austlii.edu.au/cgi-bin/viewdoc/au/cases/nsw/NSWCATGD/2017/14.html>

47) 호주의 영구 후견인(Enduring Guardianship) 제도는 당사자가 무능력일 때를 대비하여 당사자의 생활(Life style)을 결정할 수 있는 보호자를 임명하는 제도로 임명에 관한 당사자의 능력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48) Communication Disabilities Access Canada, Plain Language Summary of The Accessible Canada Act, 2018. 8. 참조.

49) 국가기관은 물론, 은행, 통신, 라디오 텔레비전 서비스 등도 포함된다.

다. 또한 해당 기관들은 장애인과 협력하여 기관의 서비스의 접근가능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불만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 이들 정보를 대중에 공유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과 장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캐나다접근성표준개발기구(the Canadian Accessibility Standards Development Organization)’가 설립될 수 있다. 동 기구는 접근성 증진 방안 등을 정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동법에 따라 법 적용 대상 기관들이 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접근성 위원(Accessibility Commissioner)이 임명된다. 위 위원은 위 기구의 장에게 접근성 증진 방안 등을 조언하고, 단체들의 법령 준수를 확인하고 장애인들의 주요 민원도 처리할 예정이다.⁵⁰⁾ 동법은 위반 기관 등에 경고조치, 벌금 등 부과의 근거를 두는 등의 방법으로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50) 장애인들을 민원을 처리하는 단체로는 캐나다 인권위원회(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가 있다.

IV. 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 진술권 침해 사례

장애인 진술권에 관한 여러 법령의 내용과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그 개선 방안을 논하기에 앞서 연구에 참여한 변호사들이 경험한 장애인 진술권 침해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논의를 구체화하도록 한다.

1 수사 과정

발달장애인 혹은 언어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들의 진술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장애인의 진술권을 배려하여 신문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진술의 요지를 신는 과정에서 장애인 진술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된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장애인들의 진술을 끌어내는 과정을 짐작할 수 있도록 사용된 대체어를 있는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장애인의 진술권 침해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실체진실을 발견하는 데 더욱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

가. 언어장애인을 배제한 수사 사례

1) 경위

뇌병변 1급으로 언어장애가 심한 피해자는 서울 소재 복층빌라에서 친모 및 가해자인 오빠 부부와 함께 거주하였는데 2010년경 모친이 사망하자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감금, 상해하고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상속분 상당액을 횡령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피해자는 치과치료를 비롯한 외부진료 등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고립되어 있었으며, 교체된 활동보조인을 통하여 그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

2) 피해자의 장애 정도

피해자는 뇌병변 1급으로 언어장애가 매우 심하여 기본적인 발성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지적능력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변호인은 피해자와 상담 시 O, X 판을 통하여 피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상담 결과 피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었음.

3) 수사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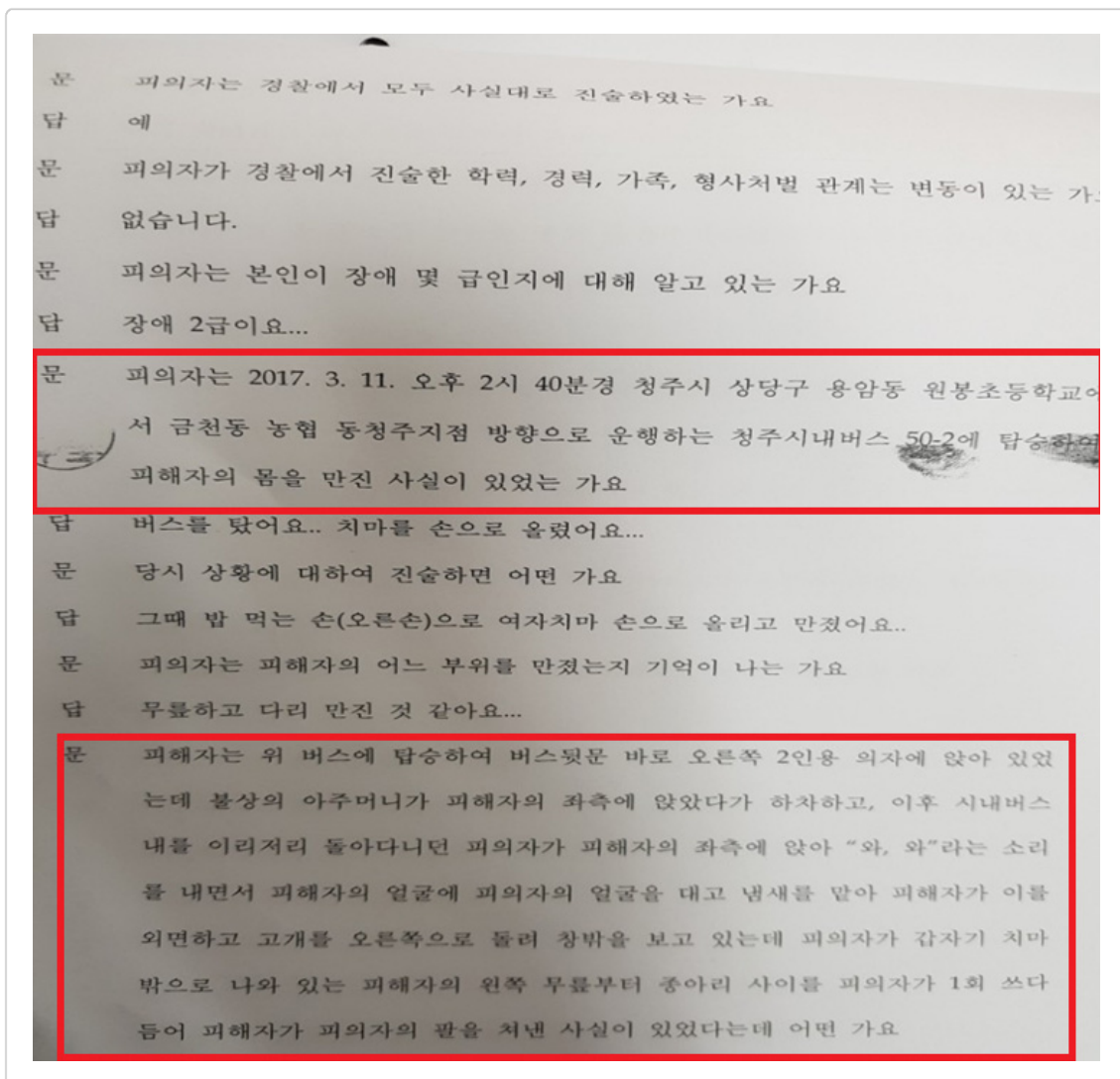
수사기관은 피해자와의 소통의 어려움을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은 간략화 하고 주변인의 진술에만 의존하려고 하였다. 특히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조차 ‘굳이 장애인이 직접 말할 필요가 있냐’고 반문하면서 피해 사실은 활동보조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장애인이 사법절차적 기본권의 주체임을 망각하는 언행을 계속하였다. 변호인이 활동보조인의 진술은 전문진술일 뿐이라는 점을 설득하여 피해자에 대한 단 1회 형식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진술은, 피해자가 지적 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활동보조인 및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가의 진술로 대체되었다.

피해자는 지적 능력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 수사관의 말을 이해하는 정도와 속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마치 어린 아이처럼 응대하였다. 피해자는 오랜 기간 고립되었다가 자립생활을 결심하고 가해자들을 고소하게 되었고, 수사 과정에 피해자가 직접 참석한다는 것은 자립생활의 계기를 스스로 확인하고 다짐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용기에 대하여 응답하는 우리 사회의 첫 반응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체적인 표현 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진술권을 철저히 침해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나. 발달장애인에 대한 진술권 침해 사례

1)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없는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사례

아래 조서 질문이 조사의 결과를 담은 압축적인 내용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발달장애인이 그 취지를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보인다. 이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비장애인의 경우도 비슷하리라 생각된다.



2) 발달장애인을 신뢰관계인과 분리하고 구속한 사례

피고인은 ‘0000. 0. 00. 서울 소재 사우나 1층에서 피고인의 발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000(18세, 여)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피고인의 발바닥으로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된 후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 김수진(가명)의 강제추행미수 사건에 관하여 신문하다.

문 : 피의자는 김수진(가명)을 알고 있나요

답 : (묵묵부답)

문 : 피의자는 피해자 김수진(가명)을 처음 본 사람인가요

답 : 예

문 : 피의자는 김수진(가명)을 추행하려고 한 사실이 있나요

답 : 예

문 : 피의자는 2017. 5. 14. 19:30 - 20:00경 사이 청주시 상당구 월평동 220번길
세븐일레븐 청주용암제일점에 간 사실이 있나요

답 : 예

문 : 세븐일레븐 청주용암제일점에는 무슨 일로 갔나요

답 : 편의점 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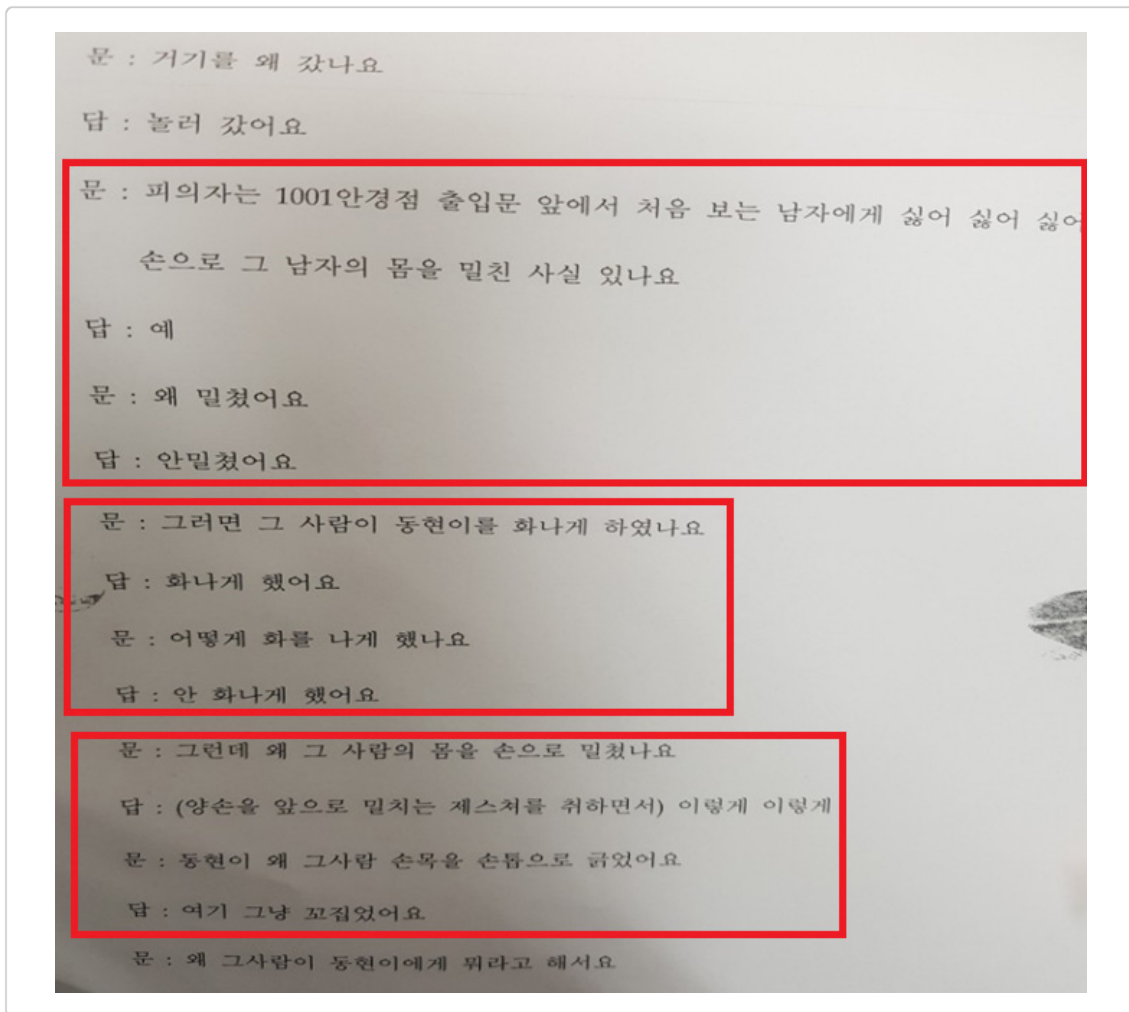
문 : 편의점에 뭐하러 갔는지 기억하나요

피고인에게는 신뢰관계인인 친형(유일한 혈육으로 동거인은 친형밖에 없었음)이 있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친형의 연락처를 확인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친형과 연락이 취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졌다.

친형은 발달장애인인 동생을 수소문하였으나 찾지 못하다 실종선고를 하러 경찰서를 방문하면서 동생이 위 범죄사실로 구속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지하였다. 피의자인 발달장애인은 찜질방에서 기지개를 피다가 발바닥이 여성의 신체와 닿았다고 주장하였는데, 발달장애인의 지적 능력에 비추어 이야기를 꾸며내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심리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수사를 받고 자백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3) 발달장애인의 모순된 답변이 있음에도 진술을 유도하는 사례

발달장애인은 수사기관의 의도대로 답변하면서도 그 이유를 물어 보는 질문에는 최초 답변을 반복하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반복 답변하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대체어를 활용하거나 개방형 답변을 유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의도대로 진술을 이끌어 가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는데, 이 역시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여 진술권이 침해된 사례 중 하나로 분류할 수 있다.



4)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백으로 정리한 사례

발달장애인은 질문자의 의도에 따라 답변하는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답변을 자백으로 보아 보충질문 혹은 수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도 발견할 수 있다.

다.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부족

청각장애인인 피고인은 절도 혐의를 받고 있었고, 청각 손실이 80데시벨 이상이어서 사람의 입 모양을 보고 대화를 이어나가야 하고, 발성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발성이 가능하고 입모양을 보고 말을 이해한다는 이유로 마치 비장애인이 진술한 것처럼 조사를 하고 마무리하였다.

문: CCTV를 보면 피의자가 구경하다가 코트 안으로 의류를 집어 넣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맞는 가요

답: 네 맞아요

문: 11. 22. 범행시에는 기억이 나는 가요

답: 동영상을 보니까 기억이 나요

문: 11. 22. 범행 이후에는 어디를 갔는 가요

답: 점심시간이 끝나서 사무실에 갔어요

문: 11. 22. 절취한 의류는 어떻게 했는 가요

답: 제가 욕심이 나서 훔치기는 했지만 제가 입기가 좀 그렇고 무서운 생각이 들고 찢찢해서 그냥 아는 사람에게 줬어요

문: 11. 22. 절취한 의류도 18일 절취하여 줬던 사람에게 줬는 가요

답: 또 다른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줬어요

문: 아무런 대가도 없이 고가의 의류를 줬는 가요

답: 네

2 재판 과정

가. 심리적으로 동요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신뢰관계인 입회를 보장해 주지 아니하고 발달장애인 본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는 사례

심리적으로 동요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하여 신뢰관계인 입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발달장애인 본인 진술 태도 등을 지켜 볼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자백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발달장애인의 심리적 지원을 차단하는 소송 지휘는 발달장애인의 진술권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

나. 발달장애인에 대한 대체어 사용을 하지 아니하는 사례

발달장애인의 노동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판부에서 ‘연세가 몇이시냐’, ‘어떤 업무를 하였느냐’고 하는 등 어려운 용어로 질문하여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견된다. ‘나이가 몇인지,’ ‘식당에서 하던 일이 무엇인지’ 등 대체어를 사용하여 물어 보았으면 충분히 진술할 수 있었던 사안인데, 대체어 사용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 역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진술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성인인 발달장애인에 대해 반말하는 사례

성인인 발달장애인(지능지수 47, 사회지수 48)인 피고인에게 마치 어린아이를 훈계하듯 하면서도 범죄사실과 관련한 질문은 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었고, 특히 지적장애인에 대하여는 재판을 쉽게 설명해 준다는 것을 이유로 성인인 장애인에게 반말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발달장애인들은 학습된 무기력으로 인하여 자신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더욱 본인의 언어로 진술하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진술권이 침해될 여지가 크다.

V. 장애인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각종 제도들의 한계 및 개선방안

1 진술조력인 제도

가. 문제의 제기

상기한 바와 같이 진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 피해자들의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내지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수사 과정이나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성폭력처벌법 제36, 37조).

진술조력인 제도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진술권 증진을 위한 입법론적 개선사항으로서 ① 장애인이 피의자인 경우에도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② 성폭력범죄 외의 일반 범죄에서도 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⁵¹⁾ 활동가들도 대체로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본 연구 집필진의 입장도 같으나, 진술조력인 제도의 확대는 장애인 진술권 증진을 위한 궁극적인 방안은 아니며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진술조력인 제도의 개선방안과도 직결되기에 논의하도록 한다.

나. 진술조력인의 자격⁵²⁾

첫째, 진술조력인은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객관적인 자세를 가짐과 동시에 인간의 심리를 이해

51) 위 법무부 보고서 65면 참조.

52) 위 보고서 57면 참조.

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하고,

둘째, 아동과 의사소통에 취약한 장애인들과 원활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및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셋째, 진술조력인은 아동 및 장애인이 갖추고 있는 인지 능력, 정서·심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 내용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넷째, 성폭력과 관련된 국내 형사사법시스템의 절차 및 처리과정, 관련법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 진술조력인의 지위와 역할

법무부장관이 양성하는 진술조력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중립적인 지위에서 상호간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성폭력처벌법 제35조 내지 38조 참조). 이해의 편이를 위하여, 위 법무부 보고서의 관련 내용을 발췌하도록 한다.⁵³⁾

1) 진술조력인 역할 수행의 일반적 원칙

- ① 진술조력인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해야 하며, 이들의 주된 임무는 실체적 진실 규명에 있다.
- ② 진술조력인은 진술자와 라포(rapport)를 형성하고 진술자와 조사자 양방향의 의사소통을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활용하여 조사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③ 진술조력인은 진술자의 진술 신빙성 내지 신뢰성에 대한 의견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
- ④ 진술조력인은 사적으로 피해자를 만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일 피해자를 만나야 하는 경우라면 중립적인 제3자(담당 수사관 등)를 동반하여 증인을 만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피해자와 친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인, 변호사는 진술조력인이 될 수 없다.

53) 위 보고서 42면 참조.

2) 수사 전 단계의 역할

- ① 진술조력인은 수사 이전 피해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피해자의 인지적 심리적 특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보호자를 면담하되, 사건과 관련된 대화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② 또한 사건 관련 기억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술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예비적 보고서를 작성한다.

3) 수사 과정에서의 역할

- ① 조사 경관과 함께 조사 계획을 함께 수립한다.
- ② 진술이 왜곡되지 않는 중립의무를 다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되, 휴식시간 동안 조사경관에게 조사 중 관찰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고지하고 최적의 진술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 논의한다.
- ③ 진술자의 배경정보를 정리하고, 진술 당시 피해자의 정서 내지 심리적 특수성, 이후 조사 내지 공판단계에서의 효과적인 질문의 방식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⁵⁴⁾

4) 독일 Schleswig-Holstein주의 진술조력 실무 지침상 진술조력의 과정⁵⁵⁾⁵⁶⁾

가) 공판 개시 전

- ① 피해자와의 만남, ② 변호사와의 교섭, ③ 법과 형사절차에 대한 피해자와의 대화, ④ 형사절차 두려움 없애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법정 견학, ⑤ 피해자 외의 피해자 가족 등 관련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 검토, ⑥ 피해자의 일상생활 극복 지원, ⑦ 피해자를 위한 24시간 전화대기

나) 공판 진행 단계

- ① 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② 공판정 동석, ③ 각종 행정 절차 해결, ④ 공판정에서 피해자가 긍정적이고 자신감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

54) 재판과정에서의 역할은 수사 과정과 큰 내용상의 차이는 없으므로 생략한다.

55) 조상제, '독일의 성폭력 범죄피해자 진술조력인 제도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6권 제1호, 298면 참조.

56) 진술조력인의 역할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그러하기에 그 역할을 제대로 다하면서 진술조력인의 필요한 인원과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기에 인용한다. 또한, 국내 소개된 진술조력인의 역할과 다소 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독일의 경우 중립성보다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좀 더 중요시하는 면을 발견할 수 있다.

다) 공판절차 종료 후

① 형사절차 결과 정보 제공, ②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의 제공, ③ 피고인 등이 상소한 경우 진술조력의 계속 이행, ④ 진술조력 결과 보고 및 평가

라. 장애인 진술권 증진 측면에서의 진술조력인 제도의 한계

위와 같이 국내와 독일의 논의를 종합하면, 진술조력인은 관련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신뢰관계인과 유사하게 장애인을 옹호하면서도, 형사법령과 제도를 숙지하고 수사기관과 협조하는 변호인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장애인과 수사기관 모두에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그 역할이 모순되고 상충된 측면이 있다는 점은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진술조력인에 대한 법무부와 성폭력특별법의 태도가 진술조력인의 장애인에 대한 옹호의 측면보다는 수사와 공소 유지의 측면을 강조한 점에 기인한다 생각한다.

설령 위와 같은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한 인력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법과 수사 내지 재판 절차를 이해하면서도 장애인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2 발달장애인 전담수사관 제도의 한계

가. 적정 규모의 전담 인력의 배치 필요

경찰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전국의 전담사법경찰관 규모는 전국 2,500명이었으나 2018년 들어 서울지방경찰청의 전담사법경찰관 수가 70명대로 감소하는 등 그 규모가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⁷⁾ 검찰의 경우에는 상기한 바와 같이 전국에 86명만이 전담검사로 지정되어 있을 뿐이다.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 비중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⁵⁸⁾ 지나치게 적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7)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 1개당 2명 수준에 해당한다.

58) 2017년 전체 범죄 1,685,461건 중 지적장애인이 피의자인 사건은 814건으로 전체의 0.048%이다(2017 경찰범죄통계(경찰청) 참조).

나. 인력배치의 편중 문제

경찰의 경우 전담사법경찰관은 여성청소년과에 집중된 경우가 많아 일선 경찰서의 다른 부서의 경우에는 전담사법경찰관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알고 있더라도 누가 전담사법경찰관인지 잘 모르는 일이 종종 있다. 특히 교대근무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특성상 전담사법경찰관이 항상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발달장애인이 전담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검찰의 경우에도 발달장애인 사건은 주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담당·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전문성 확보의 문제

전담사법경찰관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잦은 보직변경으로 인해 전담사법경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동안 발달장애인 사건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하고 보직이 변경되는 일도 있는 등 전문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다.

3 장애인 진술권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

가. 진술조력인 제도 관련

1) 진술조력인 목적규정의 명확화

성폭력범죄처벌법은 진술조력인의 수사 과정 및 재판과정에서의 참여 목적을 “원활한 조사 내지 원활한 증인신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자칫 진술조력인의 주된 역할이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 보다는 형사사법절차의 원활한 진행이라는 형사절차의 합목적성을 더욱 중시하는 규정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다.⁵⁹⁾

상기한 독일 Schleswig-Holstein주의 경우와 같이, 진술조력인 제도는 형사절차와 관련한 피해자의 두려움을 없애고 각종 부담을 최소화하여 형사절차를 통한 제2차 피해의 위험을 줄이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할 것이며, 이를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생각된다.

2) 진술조력인 자격 확대의 필요성

현행 법령은 진술조력인의 중립성을 강조한 나머지 피해자의 대리인이나 변호사는 진술조력인으로 선정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⁶⁰⁾ 위와 같이 진술조력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

59) 도중진, ‘범죄피해자 진술조력인제도의 실효화방안’ 47면 참조.

60)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9조(진술조력인의 선정)

-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증인신문 전에 진술조력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진술조력인을 선정한다. 다만, 당해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술조력인을 선정한다. <개정 2014. 9. 1.>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사건의 진술조력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
 2.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3. 피고인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
 4. 피해자의 대리인 또는 변호사
- ④ 진술조력인 선정은 선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진술조력인의 선정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사건의 진술조력인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
2.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해서는 특히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변호인이 법적인 측면 외의 심리적·정서적 측면에서 피해자를 옹호할 수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변호인과 진술조력인이 동일인이 될 것인데, 피해자의 권익 증진의 면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 생각한다.⁶¹⁾

나. 발달장애인 전담조사관 제도 관련

1) 적정 규모의 전담사법경찰관, 전담검사 배치의 필요성

발달장애인 전담사법경찰관, 전담검사가 지나치게 많으면 전담사법경찰관, 전담검사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인원이 지나치게 적으면 발달장애인 관련 형사사건에 대하여 적시에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전담사법경찰관, 전담검사에게 수당을 지급하게 될 경우 현실적인 예산의 문제도 있으므로 그 규모에는 정답이 없을 것이나 적정 인원 수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며, 가령 전담사법경찰관이 24시간 대기가 가능하도록 필요 인원을 법제화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인력 배치 편중 시정

발달장애인 관련 형사사건은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인 사건뿐만 아니라 가해자인 사건도 적지 않다.⁶²⁾ 피해 사건의 경우에는 다양한 지원체계(해바라기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입, 피해자국선 변호사, 진술조력인 등)가 마련되어 있으나, 가해자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전담인력을 발달장애인 피해 사건을 담당하는 여성청소년과,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주로 배치하는 것은 문제이며, 보다 다양한 부서에 전담사법경찰관, 전담검사가 배치될 필요가 있다.

3. 피의자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

4. 피해자의 대리인 또는 변호사

61) 이진국 '진술조력인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몇 가지 제안' 형사정책연구 제21권 제2호 참조.

62) 가령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접수 사건 중 30% 이상이 가해 사건이다.

3) 전문성의 확보

전담사법경찰관, 전담검사로 지정되기 위한 조건으로 발달장애인에 관한 교육을 받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해당 경찰서, 검찰청에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없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경찰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강의식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강의식 교육도 중요하나, 실제로 발달장애인을 만나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발달장애인과의 만남을 동정심을 유발하는 인위적이고 일회적인 만남으로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람을 일종의 구경거리나 실험대상으로 삼는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인권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피후견인에 대한 모니터링에 전담사법경찰관, 전담검사가 참여하거나,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 등 업무 수행과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발달장애인과 자연스럽게 접촉할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

4) 소결

발달장애인 전담조사관 제도는 발달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제도이나, 아직 걸음마 단계로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정 규모의 인력 확보, 적절한 인력 배치, 전문성 확보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궁극적으로는 전담사법경찰관, 전담검사뿐 아니라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을 포함하는 보다 많은 수사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조사기법 등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보호자에게는 경찰서 한 곳에 발달장애인 전문가 1명이 있는 것보다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일반적 지식을 보유한 경찰관 다수가 있는 편이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많은 경찰관, 검사, 수사관들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갖추으로써 우리 형사사법절차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체계가 확충되고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다. 수사·재판 실무와 관련한 제언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 관련

발달장애인은 보호자의 연락처를 암기하지 못할 경우가 많고,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없는 경우 발달장애인이 심리적 지원을 받지 못하여 사실관계가 왜곡되는 경우도 있다. 수사기관은 신뢰관계인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사 관련

청각장애인은 장애를 감추기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말투가 어눌하거나 인지가 늦을 경우 청각장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수사는 청각장애인의 진술권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 할 것이다.

3) 장애인과의 소통에 대한 제언

수사기관은 장애로 인하여 소통이 어려울 경우 당사자인 장애인에게 적절한 대체적 보완 도구 혹은 진술조력인 제도를 이용하기보다는 사건을 둘러싼 가족 등 주변인들 진술로 장애인의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대체하는 수사형태를 보이곤 한다. 즉,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피해 내용을 정리하고 장애인에 대하여는 간략한 형식 조사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진술 당사자가 지적장애인일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진술조력인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나, 뇌병변 등 중증의 언어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진술조력인 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들어 형식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장애인의 직접 진술은 증명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진술권은 장애인이 단순히 절차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할 것이다.

4) 장애인은 보호의 대상이라는 구시대적 프레임의 해소 필요성

다양한 유형의 중증 장애인들, 시설을 벗어나 사회에서 생활할 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시설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장애인들이 시설을 벗어나 독립하였다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다시 시설을 스스로 찾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학대, 가혹행위 등의 범행이 확인되어 고소·고발이 일어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애

인과 시설에 대한 인식이 구시대적인 경우를 종종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을 감금하고, 방임하는 자들은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대외적인 치적으로 포장하기도 하는데, 피해 장애인이 용기를 내어 가해자들을 고소하면 다른 장애인은 다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가해자들의 노고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고, 특히 장애인의 진술권이 배제되어 시설 측 목격자들의 거짓 진술로 장애인에 대한 착취와 방임, 학대 등의 피해 사실이 가해자들의 돌봄의 노고로 포장되어 가해자들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되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장애인이 부당하게 학대받은 것은 맞지만, 만약에 중증 장애인,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 누가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겠느냐’고 반문하는 수사관들이 아직도 발견된다. 장애인에 대한 착취, 방임, 학대가 ‘보호’로 대체될 수는 없으며, 수사기관은 장애인의 인권 주체성을 인식하고, 장애인의 직접 진술을 확보하여 진상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여서는 안 된다 할 것이다.

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활동보조인의 적극적 활용 필요성

장애인에 대한 조력의 관점에서 많은 시간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을 가장 잘 알고 이해하며 소통할 수 있다 생각한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의 말을 알아듣기가 쉽지 않은데, 자주 만나 얘기하여야만 소통이 가능하고 장애인의 의사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이 장애인 진술권의 증진과 관련한 진술조력인 제도의 근본적인 한계라 생각한다.⁶³⁾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면, 피해자 내지 피의자⁶⁴⁾인 장애인과 긴밀하게 접촉할 수도 없으면서, 어떻게 라포를 형성하여 장애인을 옹호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물론 현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활동보조인의 수준이 진술조력인 제도가 예정하는 경우에 비하여 낮을 수는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을 확대한다는 견지에선 장애인들과 일상적 접촉을 하는 활동보조인들이 해당 장애인의 형사사법절차에의 관여를 현재의 신뢰보호자 동석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63) 피해 아동의 경우에는 진술조력인 제도의 의의를 높게 인정한다.

64) 진술조력인 제도가 피의자의 경우에도 확대 인정될 경우를 상정하였다.

VI. 결론

- 사법기관의 인권감수성 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의 확대 필요성

1 진술조력인 제도

진술조력인 및 각종 조력자를 통한 장애인의 지원·옹호 또한 장애인의 진술권 증진에 기여함이 크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으나, 보다 궁극적으로는 장애인과 사법기관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에서의 소통이 증진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은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동 규정의 적용범위를 형사사법절차뿐만 아니라 모든 사법절차로 확대하고, 조력의 내용 중에 AAC를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송 관련 법령이나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 단행법에서 ‘장애인은 소송의 당사자가 되거나, 증인이 되는 등 사법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그 관여의 형식을 불문하고 장애인의 주체성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취지의 입법이 마련되는 것도 필요하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본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할 기본권의 주체라는 점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보완대체의사소통에 관한 전문가들도 많지 않다. 현재 한국보완대체의사소통학회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가 주도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실정이다. 위 조례들에서 계획하고 있는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의 홍보, 전문가의 양성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법원에서의 소송이 전자화되고 법정에서 각종 영상물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오늘날의 기술적 발전과 소수자 보호라는 법원의 사명을 고려할 때, 다른 어떤 기관보다 먼저 법원에서 AAC를 위

한 인적 지원과 물적 설비를 선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생각한다. 법원과 특수학교 등 공공기관을 필두로 하여, 장애인이 사법절차적 기본권 및 표현의 자유의 주체라는 점을 공동체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절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

〈참고문헌〉

경찰청, 2017 경찰범죄통계.

네이버지식백과

대검찰청 2018. 6. 12. 자 보도자료, “발달장애인, 전국의 전담검사가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하겠습니다”.

도중진, ‘범죄피해자 진술조력인제도의 실효화방안’, 47면.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2013), ‘진술조력인 역할모델 정립’, 22면.

염형국, “장애인차별금지법 영역을 기준으로 한 외국 사례 연구 미국 장애인법과 호주 장애인차별금지
법을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11. 10., 5면.

이진국, ‘진술조력인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몇 가지 제안’, 형사정책연구 제21권 제2호.

제3회 공익·인권 분야 연구 결과 보고서

인 쇄 2019년 6월
발 행 2019년 6월
발 행 처 서울지방변호사회
발 행 인 회장 박 중 우
주 소 06595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1길 21(변호사회관)
전 화 02) 6200-6200
팩 스 02) 6234-0353
홈 페이지 [http : //www.seoulbar.or.kr](http://www.seoulbar.or.kr)
인 쇄 경성문화사(02-786-2999)
* 비 매 품

제3회 공익·인권 분야 연구 결과 보고서



서울지방법변호사회

06595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1길 21 변호사회관
대표번호 02)6200-6200 www.seoulbar.or.kr

